

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본격

기본계획 수립·IOC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 평가대응과 유승민 과장은 16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내 유치 후보지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심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 다.

이번 용역에는 유치 전략 수립, 기본계획(마스터플랜) 마련, 정부와 IOC에 제출할 심사자료 작성, 경기장과 주요 시설의 현황 조사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기본계획에는 대회 개최 개념은 물론 종목별 경기장 배치, 교통·숙박·보건·치안 등 인프라 확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조직위원회 구성, 재정 계획, 개·폐회식 및 문화행사 계획, 자원봉사 운영, 패럴림픽 준비, 대회 이후 유



전북특별자치도 유승민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평가대응과장이 16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 활용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 청사진도 마련된다.

도는 정부 심사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정책성 평가자료와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도 함께 준비한다. IOC 제출용 유치의향서와 질의응답 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국제 무대 대응 문서도 동시에 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건축 도면과 시각자료, 드론 촬영 영상 등을 활용한 자료도 제작된다. 해당 자료는 정부와 IOC의 현장 실사 및 평가에 활용된다. 이번 용역은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제안서 평가와 기술·가격 협상을 거쳐 5월 초 계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유승민 도 전주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평가대응과장은 "이번 용역은 전북이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 유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IOC의 심사 단계에 철저히 대비하고 전북이 고유한 도시매력과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올림픽 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

진보3당 공동 대선 경선 참여



정의당 권영국 당대표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진보3당과의 공동 경선에 나선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오현숙)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대표가 노동당, 녹색당 등과 함께 '사회대전환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진보3당 공동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에는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도 참여한다.

정의당은 지난 12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대선 방침을 확정하고,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불평등 구조 청산과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며 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다.

이번 대선 방침에는 △내란 세력 청산과 정권교체를 넘어선 개혁 추진 △개헌과 진보 정치 재편 △진보정당 간 공동 대응 등이 포함됐다.

권영국 대표는 16일부터 경선 운동에 돌입하며, 오는 26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이후 27일부터 30일까지 사회대전환연대회의의 소속 단체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의당은 "불평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의 시작에 국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민생경제 회복

위한 신속집행 강화 협력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6일 새만금 권역의 민생경제 및 건설경기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SOC 등 중점사업들에 대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조흥남 차장은 올해 1분기 신속집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고,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재정집행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조흥남 차장은 "정부의 신속집행은 국가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정책으로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 등을 통해 최우선 과제로 실천할 것"을 당부하면서 "지난 3년여간 민간기업들이 정부를 믿고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만큼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정부의 재정투자도 신뢰감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대선 경선 시작

도당 “내란 종식·민생 회복의 길로”

“이번 대선, 빛의 혁명이 만든 대전환의 계기… 반드시 승리”

한 대행 비판도 이어가 “헌법재판관 지명 시도, 내란 연장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16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이날 김솔지 수석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경선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이날, 민주당 경선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다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선을 “윤석열 정권의 친위쿠데타를 종식시킨 ‘빛의 혁명’이 만든 대전환의 계기”로 규정하며, “반드시 승리에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100만 명 규모의 국민참여 경선으로 치러진다. 안심번 호로 무작위 추출된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전북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성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자임하며 헌법재판관 지명까지 시도한 것은 내란 행위의 연장선”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뒤편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대선까지 남은 48 일 동안 3인의 후보자 모두의 선전을 기원하며, “도민과 함께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등 가결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16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 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고성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달을 선점하자, 달 의도시 정읍’을 통해 정읍시의 달을 통한 도시 브랜딩 전략을 강조했다. 이만재 의원은 인공지능(AI)이 일하는 시대, 정읍시는 여전히 수작업 중’을 통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과 시범부서 운영 등을 제안했다. 정상철 의원은 ‘나눔과 공유의 시작, 생활 공공 대여 사업 도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나눔문화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도형 의원은 ‘전국 최대규모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와 연계한 폐배터리 산업기지를 조성하자’를 통한 지역소멸의 위기 탈출방안을 건의했으며, 송기순 의원은 ‘제1형 당 노병 환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를 통해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제1형 당노병의 올바른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안건심의는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채택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서향경·이만재·정상철·오승현·송기순·한선미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임시에 방점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현·이만재·서향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공공심 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김승범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운·이만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서향경·정상철·오승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환·송기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최재기·오명제·고경운·이상길·정상철·서향경·송기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소형 특수능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오명제·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에 대하여 가결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또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유경자 의원, 김광훈 의원, 김남수 의원, 한국희 의원, 장정복 의원, 이종섭 의원 등 총 6명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고,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역~진안역 지선철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했다.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농 시기에 맞는 각종 시설 및 자재의 공급과 기상 및 병충해 등에 대한 사전 대비로 군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세월호 참사 11주기… “잊지 않겠다”

민주 도당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안전사회 실현 최선”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잊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발생 11주기가자, 10번째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

전용태 도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우리 곁을 떠났다”며 “우리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으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최근 해양심판원이 세월호 참사를 ‘명백한 인재’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구조적 실패와 무책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충분치 않다”며 진상 규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공원 착공 △세월호 선체 영구보존 △팽목항 추모공원 조성 △기억공간 보존 등 여러 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당 역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체계 마련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북도당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304명의 희생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공공의대법 조속 통과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의료개혁 골든타임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김운·남인순·백해련·서영석·소병훈·이수진·장종태·전진숙·천준호 의원(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더는 의료대란이라는 늪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이제는 미래를 향해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몰려 있고, 지방은 의료 서비스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공의대를 통해 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이 낮아 기피되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한 의대 신설이 아니라, 서남대 폐교로 생긴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성과 지역성을 갖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원들은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을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제정한 박희승 의원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이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원·남원시의원과 함께 지역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오는 17일 오전 9시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동학농민혁명·5.18 정신 헌법에 포함돼야

민주 윤준병 의원,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혁명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 했으며, 항일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불의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사건이라며, 이들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 계승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윤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과 역사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이 앞으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정의당 도당 “민주, 정치개혁 염원에 응답하라”

도내 지방의회 일탈 관련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오현숙)은 16 일, 도내 지방의회의 잇따른 비위와 일탈 행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정치개혁을 외쳤던 시민들의 열망에 반해, 전북 지방의원들의 비위는 도민에게 배신감을 안기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고창군의회 부의장은 여직원을 폭행·강제 추행한 의혹을 받았으나 군의회는 자체 조사도 진행

하지 않았고, 군산시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뺨을 때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주시의원은 탄핵 정국과 산불 피해 상황 속에서 위유성 연수를 다녀와 비판을 받았으며, 전북 도의원은 수십억 원대 에너지 사업을 청탁한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은 그간 ‘염정 대응’을 약속해왔지만, 도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는 없었다”며 “정치개혁을 외쳤던 시민들의 뜻을 잊지 말고, 전북에서부터 책임 있는 정치를 시작하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